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1. 6. 29(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1. 6. 29(수)	담당부서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
담당과장	이장로(2150-7230)	담당자	강준모 사무관(2150-7231)

제목 : “ 취업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해야 ” -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고용 분야 -

-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학계·언론·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및 정책고객들과 함께 고용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일시 및 장소: 6.29(수) 10:00~12: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최근 고용동향이 실업률 등 지표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 등 취업계층의 고용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이렇게 경기에 따라 밀접한 영향을 받는 취업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각 계층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이에 맞는 세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언급
- ☐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고용률 개선)과 질(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을 모두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타겟팅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토론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냄

○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확대, 근로관행 개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 등 필요

- 특히,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 청년층의 창업창직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Matrix형으로 재설계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컨설팅-자금대부를 Total Care 방식 지원 할 필요

- 방청객으로 참석한 단국대 경영학과 이은혜 학생은 “일각에서 요즘 청년들은 도전정신, 모험정신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있는 데, 이는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커져서 그렇게 보인 것일 뿐 실제 주위에서 보는 친구들은 매우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 고용부 창조캠퍼스 사업 같이 젊은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창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기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음

○ 현재 2,000시간 넘는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1,800여 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줄이기, 유연근무제의 확산 중요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를 자치단체에서는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 전달체계 개선 필요

○ 일자리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예산편성에 환류하는 시스템 정착

○ 고령자 고용연장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토론자료 주요내용 ◆

< 1세션: '11~'15년 일자리 분야 투자방향 >

1. 최근 고용동향 및 향후 노동시장 전망

- ☐ (고용동향) 경기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 추세 지속
 - '10년 청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42천명 감소, '9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 지속, 고령자 취업자 수는 견조한 증가세 지속
- ☐ (향후 노동시장 및 경제사회 여건)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어려움 상존

2. 고용분야 재정투자 성과 및 평가

- ☐ (성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초래된 고용악화에 빠른 회복세 실현
 - 재정지원 일자리를 취업 취약계층 타겟팅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효율화 방안 추진
- ☐ (평가와 과제)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외환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내 체감지수도 낮은 상황
 - 중소기업-대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취약

3. 일자리분야 재정투자 방향

3-1. 기본 투자방향

- ☐ 성장의 고용효과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성장의 고용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
 -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부문에서의 고용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률 제고 필요

- ☐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확대로 재구조화
 -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투자 확대
-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고령자 및 여성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서비스를 강화
 - 중·고령자들의 고용연장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생계지원 강화
 -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위해 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대 및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자금을 확대 필요
-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자체 수요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프로젝트펀딩 형식으로 지원하고, 유사·중복 방지 등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3-2. 부문별 투자방향

- ☐ (청년) 창업·창직 활성화 및 미스매치 중점 지원
 -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화(Matrix형 재설계)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컨설팅-자금대부를 Total Care 방식 지원
- ☐ (고령자)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 퇴직 유도 등 재직자의 고용유지 강화 및 전직 지원 서비스 강화
- ☐ (여성) 보육·가사의 부담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 ☐ (근로빈곤층)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 축소
 - 유사 취업지원서비스인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유사·중복성 해소, 민간위탁사업 효과성 제고 등

< 2세션: 인건비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제고방안 >

1. 직접일자리 사업 개선방안

- ☐ 직접일자리 사업의 예산규모 및 지원인원은 감소 추세
 - * ('08) 1.5(30) → (09추경) 3.9(80) → ('10) 2.7(58) → ('11) 2.5조원(56만명)
- ☐ 총량적인 측면에서 미세감소 방향으로 지출예산을 조정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통해 사중손실 방지
-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업 운영
-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전문서비스 사업의 경우 은퇴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자원봉사형 서비스 공급체계 도모(구축효과 방지)
- ☐ 직접일자리창출 사업의 개념 및 범위의 재정립 필요
- ☐ 목표집단의 선별을 통한 선택과 집중, 중앙과 지방정부간 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2. 고용지원금 사업 개선방안

-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의 복잡다기화 및 높은 사중손실 발생
 - 취약계층 고용촉진 및 기업 고용창출사업으로 성격 변화
- ☐ 개선방안
 - 고용창출지원제도를 의무지원 방식에서 재량지원방식으로 전환
 - 고용지원금 사업을 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 모럴해자드 방지 및 실업탈출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 강화

참 고

고용분야 공개토론회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사회자	정병석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발제자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어수봉	한국교육기술대학교 교수
토론자	소기홍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김부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철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경흠	내일신문 기자